

사회

5·18 30주년 결산 ㉔ 빛나간 통합·상생

소통 부재 '반쪽 행사'

행사위·기념재단·5월단체 '따로따로'

시민 관심·참여 이끌어내기엔 역부족

30주년을 맞은 5·18민중항쟁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지만 30주년 기념행사는 여전히 '소통의 부재'라는 난관을 넘지 못했다.

의 가치 복원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성향을 강하게 포함했다는 지적이다.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와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 기념행사 관련 3개 기관들은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애초 30주년의 목표였던 5·18의 전국화·세계화, 지역사회통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의 기본정신이 민주·인권·평화인 만큼 행사 기조가 민주주의의 가치 복원에 초점을 둔 점은 무리가 없으나 특정 분야에 행사의 역량이 쏠리면서 30주년에 맞는 대화합과 응서라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30주년 기념행사위가 주로 진보진영의 단체들로 구성되어진 정보 이념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이다. 이 때문에 기념행사 상당 부분이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시국 관련 내용으로 치러져 5월 행사의 정치적 이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들리는게'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햇볕이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30주년 행사는 지난 2월 30주년 기념 '시민강화'를 시작, 5월 30일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등 61번째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또한 민주대성회나 국민대회, 전국노동자대회를 5월 행사에 포함해 4대강 사업 반대와 무너진 남북관계 신뢰 회복, 반MB정서를 반영한 시국 선언 등 반정부적인 성격과 투쟁 성향이 강해 30주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

그러나 이번 5·18기념행사는 기획됐던 행사의 기조와 추진 방향 가운데 '5·18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5·18'이라는 측면보다는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

의 의미가 약화됐다. 이로 인해 '기억하라! 맞서라!'를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 29주년보다 1000여명 줄어든 3000여명이 참석한데 그쳤다.

5월 관련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단체들이 자신들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행사들이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크게 부족했다. 5월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을 맞이한다는 뜻을 모아 대형 행사 한두 개를 기획해 시민들과 공동으로 치러자는 의견들이 수용되지 못한 것이다.

5·18기념재단도 기념행사들이 5월과 관련된 많은 이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치르도록 노력했어야 하나 행사위나 5월 단체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5·18단체의 한 관계자는 "5·18 기념행사는 기본적으로 오월 영령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데 있고,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 기념행사는 시민 참여 없이 단체차원의 참여만이 남부했다"고 자평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5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오거리의 선거 유세 현장. 확성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치가 84.4dB로 주간 생활 소음기준(80dB)을 넘었다.

선거 유세 확성기 소음 측정해 봤더니

금남로 1가 85dB 가장 심해

10곳 중 6곳 기준 초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관련법에 소음규제 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 확성기 볼륨을 최대한 높여 사용하는 바람에 주택가나 업무 중심지 등에서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25일 주요 도로·주택가 주변 등 선거 유세장에서 흘러 나오는 로고송 및 연설장 등의 소음을 직접 측정해 봤다.

이날 각 구별로 선거 유세장 2곳, 모두 10곳을 선정된 뒤 유세차량 확성기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도(5분간 최고·최저 평균값)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기준(80dB)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0dB은 1m 거리에서 들리는 보통

■선거유세차량 소음 측정결과 (단위: dB)

구	주소	시간대	소음도
동구	계림동 계림오거리	오후 2:00	79.50
		오후 6:00	84.95
서구	금남로1가광주YMCA 앞	오후 12:00	77.60
		오후 1:00	84.10
남구	진월동 광주시청앞	오후 3:00	81.60
		오후 3:30	77.05
북구	안동동 신흥역사 앞	오전 7:00	80.43
		오전 8:00	74.10
광산구	울곡동 월곡2동 주민센터 앞	오후 2:00	84.25
		오후 2:30	80.00

사람들의 대화 소리이며, 65dB은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소리를 1m 앞에서 듣는 정도의 소음이다. 또 70dB은 1m 앞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유선전화 벨소리 정도의 소음, 80dB은 지하철 승강장 중간지점에 서서 들리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한 직후의 소음에 해당한다.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동구 금남로 1가 광주YMCA 맞은편 유세장으로 소음도가 84.95dB였다.

이러 광산구 우산동 송정농협 북부지점 앞이 84.25dB, 서구 양동 양동시장 입구 앞길이 84.10dB, 남구 진월동 광주시청앞 앞길 81.60dB, 북구 양산동 신흥역사 앞길 80.43dB, 광산구 울곡동 월곡2동 주민센터 앞길이 80.00dB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북구 두암동 롯데슈퍼 앞길로 74.10dB였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3항)상 주거지역에서 확성기 사용할 때는 아침·저녁(오전 5시~7시, 오후 6시~10시)에는 70dB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80dB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 성인 남성 기준, 80dB 이상의 소음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귀 안의 감각 신경에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운동의 억제 및 순환기 질환을 비롯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30) 김중두



김품사기 골프강사 집유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집 판사는 25일 '골프 캐디 양성 법인의 임원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골프강사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5년 3월과 2008년 1월 모 캐디 양성법인의 이사과 광주·전남본부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2명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희기자 choice@

보수단체 친안함 비판 김용욱 고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남북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5일 친안함 사태와 관련, 민군 합동 조사단의 발표를 비난한 도을 김용욱(6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들 단체는 김씨가 봉은사 특강에서 합동조사단 발표를 비난한 것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김씨는 지난 23일 봉은사 특강에서 친안함 사태를 비난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4대강 개발도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박당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며 강도높게 비난.

/연합뉴스

"연구비 인건비로 사용한 교수 해임 부당"

광주지법 "징계 가혹"

정부기관이 대학 측에 위탁한 연구비를 자신이 설립한 벤처회사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다가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5일 전남대 전 교수 권모(65)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연구비를 전용한 것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자신의 벤처회사 연구기술훈원

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05년~2008년 전남대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8억8000만원을 집행하면서 4900여만원을 자신의 벤처회사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권씨는 이후 검찰에 고발돼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수익원 가로챌 2명 영장

여수경찰은 25일 숨겨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2명 중 김모(63)씨와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외국 계좌 개설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 6명에게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장애인 등 13명 허위 부재자신고

곡성선관위, 요양시설 원장 등 2명 고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6·2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남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곡성 모 요양시설 원장 A씨(56)와 특정후보 지지자 B씨(52)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B씨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서 9부를 건네 받은 뒤 중증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원생 13명 명의로 신청서를 인의로 작성한 뒤 이를 지난 17일 B씨에게 건넸다. 또 B씨는 이를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지가 곡성군 곡곡면으로 돼 있는 이들 원생들의 부재자 투표는 관련법에 따라 원장의 서명을 받아 당사자가 거주지에서 직접 신청토록 돼 있으나, 조사 결과 원생 대부분은 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www.hanbit.ac.kr

개강 ▶ 6월 1주 ▶ 6월 14일(토)~15일(일)

압도적 7위 시설 합격을 강시진

79명 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유일 79명 단독반 매월 짝/을수반 개강

7.4명 합격문제풀이, 7.4명 합격문제풀이, 7.4명 합격문제풀이

심화문제 25명, 23명, 23명, 23명, 23명

수석합격자 매출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